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지난 10년간 정부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출된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내실화를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는 생활보호제도의 기초보장제도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의 활성화 등 특정 한계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도 국민의 정부와 동일한 정책기조하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로 불려졌던 각종 제도에 대한 내실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의 개발로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미흡한점이 발견되어 정책의 기조와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정착, 지속발전가능 사회안전망의 선진화, 사회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한 건강투자확대와 효율적 건강관리체계구축, 그리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양적인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질적인 차원의 정책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의 양적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정책체감도 및 수용성제고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사회서비스활성화를 위한 투자체계구축,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질적 수준제고 등은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목표**